

POLITICS

2025년 3월 31일 월요일

늦어지는 탄핵선고에 여야 대치 더 심화

친환경농업 필수 유기질비료 지원도, 201억 들여 43만6000t 공급

전남도는 농축산 부산물의 자원화를 촉진하고 유기물 공급으로 토양환경을 보전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을 추진하기 위해 유기질비료 43만 6000t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유기질비료는 동물의 배설물, 미생물 등을 자원화·재활용해 유기물을 주원료로 만든 친환경 비료다. 토양 생태계를 건강하게 유지하고 환경을 보호하는 친환경 농업 필수 농자재다.

올해 전남도의 지원 규모는 201억원이다. 혼합유박 등 유기질비료는 7만 6000t, 38억원, 가축분퇴비 등 부숙 유기질비료는 36만 163억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 비료는 혼합유박·혼합유기질·유기복합 등 유기질비료 3종과, 가축분퇴비·퇴비 등 부숙유기질비료 2종이다. 비료 등급에 따라 포대(20kg)당 1300원에서 1600원까지 보조금을 차등 지원한다.

선정된 농업인은 영농 일정에 맞춰 지역 농업에서 수행한 유기질비료를 토양에 공급하고, 신청한 유기질비료는 올해 9월까지 수령해야 한다. 미수령 농업인은 포기한 것으로 간주돼 10월까지 추가 지원 대상자를 선정해 남은 물량을 배정할 예정이다.

김영서 전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친환경농업인이 유기질비료를 적극 활용하면 환경보호와 고품질 농산물 생산, 토양 비옥도 증진 등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유기질비료를 지속해서 공급, 친환경농업 기반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농가 소득기반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광주보건환경연, 꿀벌 질병 검사 153호 대상... 꿀벌응에 등 14종

광주시보건환경연구원은 꿀벌의 활동이 활발해지는 봄철 개화기를 맞아 지역 양봉농가를 대상으로 ‘꿀벌 질병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한다.

꿀벌 질병 검사는 양봉 현장에 방문해 사육 실태를 조사하고, 기어다니거나 질병이 의심되는 꿀벌을 채취한 후 유전자 정밀검사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법정 가축전염병인 나충봉아파제병(꿀벌 애벌레 부패)을 포함한 총 14종의 꿀벌 질병을 검사한다.

이번 검사는 오는 4월 말까지 지역 양봉농가 153호(약 1만7730봉군)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검사 결과는 신속히 농가에 통보한다. 질병 예방·치료법, 사양관리 지도도 함께 이뤄질 예정이다.

광주보건환경연구원원이 지난해 양봉농가 33농가에서 106건의 질병 검사를 실시한 결과, 날개불구바이러스(87.7%), 검은어왕벌바이러스(54.7%), 이스라엘 급성마비증(46.2%), 노제마증(27.4%) 등이 검출됐다.

광주보건환경연구원원은 이번 검사와 함께 꿀벌 ‘꿀벌응에’ 방제 홍보·지도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꿀벌응에는 꿀벌의 체액을 빨아먹으며 면역력을 저하시켜 봉군(벌떼)의 건강을 위협하는 주요 기생충이다. 꿀벌응에가 증가할 경우 날개불구병 등 바이러스 질병이 확산될 위험이 높아진다. 꿀벌응에는 여름철부터 급격히 증가하지만 봄철부터 방제를 시작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정현철 광주보건환경연구원장은 “응에 방제는 단순한 기생충 관리가 아니라 봉군의 건강을 유지하고 꿀벌 바이러스 질병을 차단하는 필수적인 과정”이라며 “양봉농가는 정기적으로 소독과 방제를 철저히 시행하고 질병 의심 증상이 발견되면 즉시 연구원에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여, 이재명 무죄에 “尹 복귀를” 목소리 고조야, 마 임명 압박...재판관 임기 연장 주장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4월로 넘어가면서 여야의 대치가 가팔라지고 있다.

여야는 각각 탄핵 찬성과 반대 입장을 앞세워 국민 지지를 호소하는 주말 장외 여론전을 뜨겁게 펼치는 한편 개별 의원들도 다양한 형태의 시위를 벌였다.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은 헌법재판소 앞에서 ‘탄핵 기각’ 혹은 ‘각하’를 주장하는 릴레이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현재의 결정에 앞두고 지지층에 호소하며 사법부의 판단에 압력을 행사하는 듯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김기현, 윤상현, 박성민, 장동혁 의원 등은 서울과 울산에서 각각 개최된 탄핵 반대 집회에도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빠른 파면 결정을 촉구하는 회견을 가졌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행보가 헌법 정신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다면 신속한 재판소의 결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서울 도심에서 열린 탄핵 찬성 집회에 대거 참여해 헌정질서 회복을 바라는 여론에 호소했다.

여야의 대치가 이처럼 첨예해 진 까닭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론을 30일까지 내리지 못하면서 양측의 불안감이 동시에 증폭됐기 때문이다.

여기에 오는 18일로 예정된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 만료 등이 맞물려 여야의 정치적 셈법도 복잡해졌다.

국민의힘에서는 이 대표의 항소심 무죄 정을 앞두고 지지층에 호소하며 사법부의 판단에 압력을 행사하는 듯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이대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이 대표의 득표를 막기 어렵다는 위기감이 커지는 분위기다.

여당은 대법원을 향해 이 대표에 대한 항소심을 조속히 파기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있다. 하지만 당장 윤 대통령 탄핵 기각·각하를 통해 조기 대선을 원천 봉쇄해야 한다는 강경파가 당 분위기를 주도하는 듯한 모양새다.

국민의힘 의원 다수는 윤 대통령 탄핵 기각·각하 촉구 시위 등을 이어가고 있으며, 당초 중도중단을 고려해 언급을 자제하던 지도부에서도 ‘윤 대통령이 돌아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하는 기류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민주당에서도 현재가 흑역사도 인용 아닌 다른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는 의구심이 번지면서 불안해 하는 분위기가 짙어졌다. 일부 초선 의원들은 중심으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더해 다른 국무위원들까지 연쇄 탄핵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이런 맥락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4월 1일까지 헌법 수호 책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중대 결정을 할 것”이라며 “윤석열 복귀” 프로젝트를 멈추고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4월 1일까지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지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이라는 국민의 신임을 배신했다고 판단하기에 충분한 기간이 흘렀다”며 “헌법기관인 국회는 헌정질서를 수호할 책무가 있고, 민주당은 주어진 모든 권한을 다 행사하겠다”고 강조했다.

마 재판관 임명 촉구하는 문·이 재판관의 임기가 끝나는 오는 18일 전까지 윤 대통령 파면 선고가 나오지 않는 상황도 고려한 것이다. 이들의 후임이 임명되지 않으면 임기를 연장하도록 헌법재판소법을 개정하는 방안마저 거론된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국힘, 법원판결 입맛대로 재단...판사까지 공격”

정준호 의원, ‘이재명 대표 2심 판결’ 국힘 왜곡 비판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광주 북구갑·사진)은 이재명 대표의 2심 판결과 관련해 국민의힘의 거듭된 왜곡에 대해 “국민의힘을 비롯한 극우세력이 법원 판결을 입맛대로 재단하며 판결이 아닌 판사까지 공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준호 의원은 지난 28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지금처럼 법과 상식이 무시당하는 상황이 또 언제 있겠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이 2심 판결에 승복하라고 으름장을 놓다가 무죄가 나니까 판사 중 1 명이 우리법 출신이라며 맹

비난하고 있다”며 “판결을 비하하고 왜곡시키는 행태에 ‘조변석개’, ‘지록위마’가 울고 갈 지경”이라고 꼬집었다.

정 의원은 “국민의힘이 법원을 존중하지 않는 목적이 너무도 분명하다”며 “내란수괴의 헌정파괴 행위를 엄중히 단죄하고 검찰을 활용해 제 세상을 만든 오만함을 심판할 그 상대방을 고구라뜨리는 것이 국민의힘의 오직 유일한 단 하나의 목표”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검찰의 정치적 기소도 강하게 비판하며 “검찰의 기소 과정을 한 데 모으면 ‘정적 죽이기 종합백서’도 만들 지경”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그 노력의 100분의 1 만이라도 윤석열 정권을 향해라면 우리는 지금과 같은 내란의 세월을 겪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도 내란수괴를 석방시킨 검찰의 모습을 보면 역설적으로 이 대표 기소의 실상이 어떠했는지 짐작이 간다”고 할애했다.

정 의원은 끝으로 “검찰의 기소 하나 하나가 편파적이고 부당했음이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며 ‘사법위정’이라는 문구로 현 상황을 진단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박근혜, 현재 앞 ‘끝장 1인시위’ 돌입

더불어민주당 박근혜 의원(광주 광산구갑)은 헌법재판소 앞 끝장 1인시위 이틀째를 맞는 30일 “탄핵 반대는 내전을 유발하겠다는 것과 같다”며 “나라를 망하게 하겠다는 건가? 책임질 수 없는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박근혜 의원은 지난 29일 현재 앞에서 1인 시위에 들어가며 “윤석열 파면 선고일까지 매일 24시간 1인 시위를 펼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만약 소문처럼 파면 선고를 반대하는 헌법재판관님이 있다면 그것이 헌법 파괴이며 대한민국을 내전 수준의 혼란 상황으로 이끄는 끔찍한 망국행위가 될 것임을 지적하겠다”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이어 헌법재판관들을 향해 “음쓰린 경제로 신음하는 국민들의 한탄 소리가 들리지 않느냐. 국가 신뢰도가 추락하는 것이 진정 아무렇지 않느냐”고 되물었다.

박 의원은 “파면을 인용하면, 대선 국면과 새로운 정부 수립 과정을 거치며 국가 질서가 신속히 안정을 찾을 텐데, 도대체 뭐가 걱정돼 헌법재판소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려 드느냐고 따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수의 정상적인 국민과 역



사가 결코 용서하지 않을 텐데, 평생 죄인 경제로 신음하는 국민들의 한탄 소리가 들리지 않느냐. 국가 신뢰도가 추락하는 것이 진정 아무렇지 않느냐”고 되물었다. 박 의원은 현재 앞 4~6선 민주당 국회 의원 긴급 기자회견에도 동참해 “일부 재판관들이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를 하고 있다는 소문이 들린다”며 “소문이 진실이 아니길 촉구한다. 대한민국 국민들을 부정하려 드느냐고 따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수의 정상적인 국민과 역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전남도-서울시, 마이스 공동마케팅 활성화 ‘맞손’

전남유니크베뉴 등 콘텐츠 적극 활용키로

전남도는 국내외의 마이스 행사 유치 경쟁력을 강화 및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해 서울특별시, 전남도관광재단, 서울관광재단과 ‘MICE 공동마케팅 교류협력 업무협약’을 지난 28일 서울시청에서 체결했다고 밝혔다.

주요 협약 내용은 외국인 대상 마이스 인센티브 지원 공동 프로모션, 공동 홍보 및 마케팅 프로모션, 공동 마이스 마케팅을 위해 필요한 사업 협력 등이다.

특히 외국인 대상 마이스 행사 개최 시 1인당 최대 6만원(서울시 3만~4만원·전남 2만원)의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지원 항목은 차량·행사장 임차비, 식비·다과비, 관광지 입장료, 숙박비 등이 포함된다.

협약에 따라 전남도와 서울시는 국내 여행사를 대상으로 캠퍼어와 설명회를 공동 개최하고, 국내외의 마이스 전문매체를 통해 서울시의 국제적 마이스 인프라와 전남도의 특화된 문화·관광 콘텐츠



전남도는 지난 28일 서울시청에서 국내외의 마이스 행사 유치 경쟁력 강화·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해 서울특별시, 전남도관광재단, 서울관광재단과 ‘MICE 공동마케팅 교류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를 효과적으로 결합함으로써, 국내외의 마이스 유치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두 지역은 긴밀한 협력을 통해 마이스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고 10월 개최되는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 홍보협력까지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전남도,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참여농가 지원

논물관리·바이오차 투입 등 실천 3000여농가 최대 67만원

전남도는 2025년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경종부문에 참여할 2687호 농가를 선정해 지원한다고 밝혔다.

저탄소농업 프로그램은 중간 물떼기, 논물 얇게 갈래대기, 바이오차 투입 등 저탄소 영농활동을 한 농가에 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부터 가을갈이까지 추가됐다. 가을갈이 활동은 하반기에 신청받을 예정이다.

이번에 선정된 농가는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 농농업에 종사하고 20ha 이상 규모화된 농업법인(농업인)이다.

논물관리(중간 물떼기와 논물 얇게 갈래대기) 농가에 ha당 31만 원을 지원하고, 바이오차를 투입하는 농가에는 36만

4000원을 지원한다. 논물관리와 바이오차 투입을 함께하면 ha당 최대 67만 원의 지원금을 받는다.

벼 재배 시 논물관리를 통해 메탄 배출을 줄이고 토양에 산소를 공급하는 방식으로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다. 바이오차도 벼 재배 전에 토양에 투입해 경운하면 토양에 탄소를 반영구적으로 격리시킬 수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주관으로 참여 농가 대상으로 저탄소 영농활동 이행 방법과 증빙자료 제출 방법 등을 교육을 시작했다. 10월까지 참여 농가가 정해진 방법에 따라 활동을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한 후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